

재외공관 행정직 16일 사상 첫 파업예고

평등노조-외교부

서울지노위 조정기간 만료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16일 사상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조(평등노조) 재외공관행정직지부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 기간이 6일로 만료됨에 따라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등노조와 외교부는 지난 3월 29

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였다. 평등노조는 외교부가 동결 등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자 7월 17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쟁의조정 만료일인 6일 3차 연장조정에서 ‘소급적용 없이 8월부터 5%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환율이 올랐다”며 ‘동결에서부터 1월 소급적용 1.8%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서울지

노위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평등노조는 “환차의 때문에 서울지노위 조정안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외교부의 행태에 더 이상 대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오는 16일 오후 2시 사상 최초의 대사관과 재외공관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외교부의 요청으로 9일 마지막 연장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평등노조 재외공관행정직지부가 6월 7~11일 온라인으로 진행

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상태다.

문현군 평등노조 위원장은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보조비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의 33%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라며 “급여 수준은 주재국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일부 자녀는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며 자녀 교육권·주거안정성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ghan@naeil.com



2019년 08월 09일 금요일 008면 정치

감세·배임죄 폐지에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한국당 ‘민부론’ 정체 드러나자마자 논란

**소득주도성장 대안정책 본격 검토
친기업·반노동 논쟁적 주장 상당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설 대안 정책으로 확정한 ‘민부론’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민부론’은 고전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따온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과 시장에 경제 발전의 과실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인하 등 감세론, 배임죄 폐지와 공정거래법 완화 등 친기업·규제완화 정책, 대체근로제 전면 허용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대전환위)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노동 관련 대안 정책을 논의했다.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토 단계인 보고서 내용이 일부 전해지며 논란

이 일자, 대전환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사소한 감세니 종부세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는) 폐지도 아니고, 아직 당내에서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았다”면서도 “기업 관련 법규에 배임죄를 포함해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기업 인을 위축시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고 말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며 도급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직장(시설)점거 금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도 논의 중이다. △민영화 등으로 공공기관 비중 축소 △복지의 산업화 △3기 새도시 철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이 와중에… 건설·타워크레인·현대중 노조 내주부터 파업 예고

**현대·기아차도 쟁의권 확보 비상
정부 “상황 좋지 않아” 자체 호소**

노동계가 다음 주부터 잇따라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12일 오전 7시부터 총 파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건설노조 등은 지난 6월 초에도 파업을 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발표

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6월 25일 첫 조정 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신청을 했다. 이미 지난달 중순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져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무려 8만명이 넘는 현대·기아

차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 1일 중노위 조정 중지 판결을 받아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파업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각각 70.54%와 82.7%라는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며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노조가 파업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어

노사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사측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노사 대표가 참여해 교섭을 재개했고, 아직 4차례밖에 교섭을 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또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대화를 통한 교섭의 접점을 찾기보다는 또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때마다 재벌에는 규제 완화를, 노동자에게는 노동권 후퇴와 양보를 요구했다”

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경향신문

요양보호사 ‘노동·건강권 강화’ 처우 개선

서울시, 표준급여 가이드라인·독감 무료접종·심리상담… ‘돌봄’ 질 높이기로

서울시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확보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책은 전국에서 처음 마련됐다.

서울시는 8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까지 122억원을 투입해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표준근로 계약서와 임금 총액이 아닌 세부항목(임금, 수당, 공제항목 등)이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노동권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

봄아카데미’도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요양보호사들은 연 1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과 직접 접촉해 독감 접종이 필요하지만 그간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추가 경정예산 20억5900만원을 확보했다.

대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하는 언어·성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진된 몸과 마음을 여행

과 커뮤니티 활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년 총 300명을 시작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 요양기관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무회계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도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 정책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7691원)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선 요양

보호사 8만4564명이 일하는데 2040년이면 요양보호사 수가 39만 4000명에 이르러야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서울시 복지재단은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스스로 건강을 해치며 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잇단 폭염에도… 정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책은 ‘미지근’

**위반 반복돼야 처분… 실효성 의문
광역단체보다 단속 실적도 적어
현장에선 “점검, 요식행위 수준”**

정부가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돌며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물과 소금을 비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반복돼야 지도나 권고 처분을 내리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56개 야외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 점검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 중 몇 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지는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청 관

계자는 8일 “폭염 단속은 적발 즉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번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를 하고, 그래도 또 걸리면 별금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현장 관리 감독에 나섰는데 10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게 전부다. 그마저도 별금 부과는 한 곳도 없었고, 모두 시정 또는 권고에 그쳤다.

노동청과 별도로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서울시 안전어사대의 활동 내역만 봐도 노동청의 단속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 감리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는 올 여름에만 390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미비 등 800여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단속 권한이 없어 위반 사항 발견 시

노동청에 알리고, 노동청은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있다.

이처럼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 권고에 그치고, 폭염 기간 반복 점검을 받는 곳도 거의 없다보니 현장에선 요식행위라는 불만이 많다.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모(62)씨는 “지난달 폭염 점검이 있었는데 2~3명이 나와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수준이었다”며 “이후로 작업 환경이 나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일 때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별금에 처해진

다. 기존에는 용광로나 가열로 같은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만 적용됐는데 2017년 12월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신설 및 개정됐다.

김창식 민주노총 건설노조 현장조합원 팀장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별도 휴식 공간 없이 공사장 한쪽에 천막을 치고 아쉬운대로 더위를 피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최모(57)씨는 “요즘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아침에 시멘트 작업을 해도 불가마에서 일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폭염 대책기간인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1170명 중 360명은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실려갔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장 많다. 직업별로 분류하면 응급실로 이송된 옥외 건설노동자는 384명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온열질환에 노출된 건설노동 종사자 (단위: 명)

직업별	인원
관리자	4
기능인	70
장치기계조작	44
단순노무자	266
합계	384

*8월6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1170명(사망 5명)
(자료: 질병관리본부)

“응급실에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 온열질환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기온이 낮아도 습도가 높으면 체내 수분이 빨리 배출돼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며 “온도뿐 아니라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 ‘유명무실’

채용 시 적절성 검토 취지 작년 전체의 5%만 ‘제동’

공공부문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시 적절성을검토하는‘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가도입됐지만채용에 제동이 걸린 경우는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대부분비정규직채용을 승인한셈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승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502개 기관이 5417건의 비정규직 채용 건을 심사해 이 중 305건을 불승인했다.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딴판으로 심사가 이뤄진 셈이다.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한 경우는 4654건(85.9%)에 달했고, 전체 채용 규모 중 일부만 승인한 경우도 458건(8.5%)에 달했다. 심사를 거쳐 채용된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는 6만6921명이었다.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도입됐다. 각 기관의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심사위를 꾸려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 채용 인원·기간의 적정

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비정규직 채용 건을 157건 심사해 일부 승인 5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했다. 불승인은 1건도 없었다. 교육기관 역시 180건을 심사해 단 1건만 불승인했다. 불승인 건수는 자치단체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 심사 건수 역시 3425건으로 많아 불승인 비율은 6.4%에 그쳤다. 이 밖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각각 79건(5.6%), 5건(2.0%)을 불승인했다.

사유별로 보면 일시·간헐업무로 분류돼 비정규직 채용이 승인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렇게 채용된 인원만 4만명에 달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업무’를 일시·간헐업무로 보고 있다. 여전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간제 교사·강사도 293명 존재했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8787명,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과적 일자리가 6356명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비정규직 사전 심사를 받고도 채용된 비정규직이 6만명이 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문 대통령 “일 보복 이율배반…모두 피해 보는 승자없는 게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며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 수출규제의 ‘칼’을 빼 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득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느 나라도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거시경제분과), 조대엽 고려대 교수(민생경제분

“불확실성 여전히 살아있다”

긴장 늦추지 않고 거듭 철회 촉구
이제민 부의장 “아베정부 의도는
한국을 수직분업에 묶어두려는 것”
시장 다변화 등 대응책 의견 나눠

과), 이근 서울대 교수(혁신경제분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대외경제분과)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면에 한국을 수직 분업체제 내에 여전히 묶어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짚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이 지난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되는 데에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지금 아베의 일본은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뒤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인사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한 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hyopd@hani.co.kr

석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주 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반대로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소득주도성장을 이

뤄내야 장기적으로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며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1.2조 투자… 제한해야” vs “日 맞대응 우려”

생각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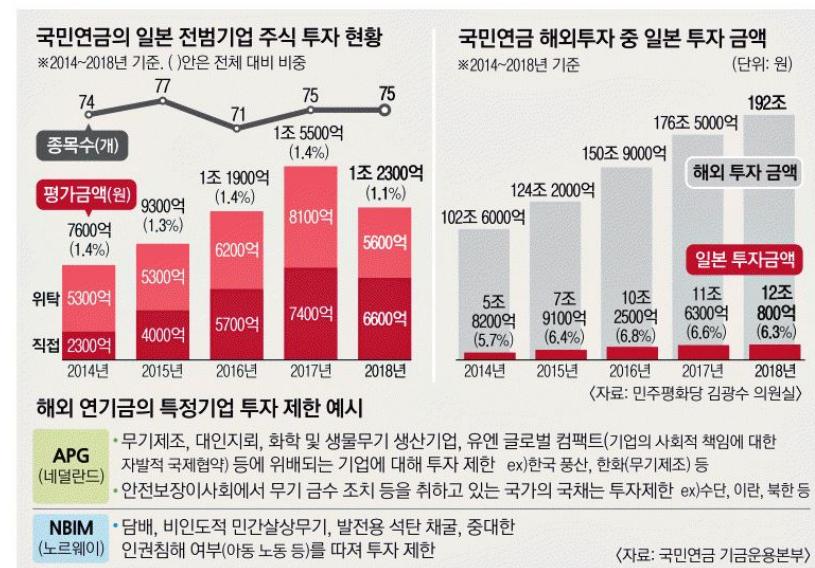
투자 매년 늘어 작년 75곳에 우리 노후자금 10만명 강제노역 미쓰비시에도 875억 日보복 상황 사회책임투자원칙 안 맞아 노르웨이 등선 인권침해·무기제조 따져 정부 “취지 공감하나 수익·안정성 원칙 日연금 韓증시에 7조… 시장교란 가능성” 새달 기금운용위 논의 의제서 일단 제외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 투자 제한에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의 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공

단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 10만명을 동원해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 미쓰비시(875억원)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 제출한 투자 현황을 보면 2014년 7600억원, 2015년 9300억원, 2016년 1조 1900억원, 2017년 1조 5500억원, 2018년 1조 2300억원 등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전범기업 투자 평균액은 5조 6600억원에 이른다. 전범기업 299개 가운데 현존하는 284곳의 26.4%에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이 들어갔다.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대법원 배상 판결을 거부한 미쓰비시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SRI)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SRI는 환경이나 사회공헌, 지배구조 등 비(非)재무적 요소를 감안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 연기금(APG)은 무기제조나 대인지뢰, 화학 및 생물무기 생산기업, 유엔 글로벌 컴팩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 등에 위배되는 기업에 대해 투자 제한 ex)한국 풍산, 한화(무기제조) 등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기 금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국가의 국채는 투자제한 ex)수단, 이란, 북한 등 NBIM(노르웨이)은 인권침해 여부(아동 노동 등)를 따져 투자 제한



담배 제조나 비인도적 민간살상무기, 발전용 석탄 채굴, 중대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으로 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도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전범기업 투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 있다. 다음 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범기업 투자 금지 문제는 이번의 제에서 빠졌다. 자칫 한일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는 우려에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정부마저 감정적으로 대응 할 수는 없다”며 “게다가 우리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훨씬 많아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일본공적연금(GPIF)이 발표한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GPIF가 한국 증시에 투자한 돈은 7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1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우리가 투자를 제한해도 일본 전범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우리 기업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수익성과 관계없이 정치·외교 문제로 투자처를 바꾸면 투자 원칙이 훼둘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설사 전범기업 투자제한 논의가 시작돼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어떤 기업을 투자 제한 기업에 포함할 것인지, 비인도적 행위의 시효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 세세하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lee@seoul.co.kr

8.15 때 대규모 반일 집회

광화문광장 2만여명 참여
일본대사관 등 방문 계획

오는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 행사에 맞춰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 2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반일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규탄할 예정이다.

6.15남측위원회 등 전국 시민사회 단체 7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 손잡기 추진위원회(8.15추진위)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민족통일대회, 아베규탄행동, 평화의 손잡기 집회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8.15추진위는 15일 행사 때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집회를 신고했다.

이창복 8.15추진위 상임대표는 “8.15는 광복을 의미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완성될 것”이라며 “최근 아베정권이 무역규제로 경제적 도전을 해오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8.15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고 우리의

사업을 알려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5일 행사에 앞서 광주와 경남 등지에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광주시민대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 옛 전남도청이 있는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준비하는 황성효 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지난달 2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밝혀 전국에서 일본규탄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10일 광주와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반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집회에는 광복회 광주지부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등도 참가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지역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규탄 현수막 달기, 거리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중앙당은 매일 당 대표 주관 대책회의 개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전국 주요도시에서 ‘아베 규탄 및 지소미아(GSOMIA) 파기 촉구 정당연설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아베 정권 규탄 정의당 시국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방국진 기자 kibang@naeil.com

노인 일자리냐, 고령자 일자리냐... 의미는 같은데 급여는 6배 差

뉴스카페

늙은 사람을 일컫는 ‘노인’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고령자’는 의미가 거의 같다. 하지만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공 일자리 급여는 여섯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일자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다. 올해만 6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 중 75%는 거리 청소와 풀뽑기 등 과거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일을 하루 2~3시간 하고 월 27만원을 받아간다.

하지만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대우가 훨씬 뛴다.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성격이 비슷한 사회봉사형 일자리는 월 50만~6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근로 시간은 노인일자리보다 길어 하루 8시간,

월 120시간까지 가능하다.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해당자 중 고용부 사업으로 옮기려는 이가 많지만 1만 명만 뽑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노인 및 고령자 대상 일자리 중 가장 처우가 좋은 것은 올해 고용부가 시작한 ‘신 중년 경력형 일자리’다. 노인일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1년을 넘지 않는 임시직이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돼 174만5150원(2019년 기준) 이상을 받는다. 사회봉사형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고령자 취업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채용 기준도 비슷하다. 노인일자리에 비해서는 여섯 배 이상 급여가 높다. 올해 2500명을 뽑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복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며 “부처별로 당치를 키우기보다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단가 후려치기’ 원청업체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법원, 하도급법 적극 인용 갑질 인정부분 추가 배상

갑질을 일삼은 대형건설사들이 피해 중소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전반에 갑질 문화를 없애자는 분위기에서 법원이 하도급법을 적극 인용한 판결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전문건설업체 S사가 원청사인 D건설사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6월 중순 선고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사법부가 적극 인용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며 뒤늦게 법조계에 알려졌다.

하도급법 제35조에는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 원청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도 록 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나 주물 취소 및 반품, 납품가의 감액 및 결제 방식 등이 결정될 때 하청기업에 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상 하청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있지만 제대로 쓰인 적이 별로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간혹 있

지만 소액 사건에 불과하다”며 “청 구액에 못 미치는 인용액이지만 10억원이 넘는데다가 손해배상이 증액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비용 하청에 전가 = D사 등 1군건설사는 3개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평택 미군기지이전공사 일부를 따냈다. 훈련소와 독신자 숙소 등을 신축하는 공사다. 전문건설업체인 S사는 D컨소시엄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토공사(건축공사 중 대지 조성공사)를 8억1900만원에 하기로 했다.

또 훈련소 콘크리트 공사와 독신자 숙소 콘크리트 공사를 각각 18억7000만원과 27억60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S사는 2015년 4월 자금난을 겪다가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D컨소시엄은 S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언뜻 보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하청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S사는 원청인 D컨소시엄의 갑질에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계약이고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D컨소시엄 참여사들은 계약서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중간에 공사비 증액을 해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핵심은 ‘돌관공사’와 건축물을 올

릴 때 거푸집을 떠받치는 ‘시스템 동바리 공사’ 비용 등이다.

돌관공사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공기마감을 앞두고 집중공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S사는 돌관공사에 투입된 추가공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D컨소시엄은 “노무비 50%만 부담하기로 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S사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2배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돌관공사 추가 비용 중 절반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은 건설기본법상 무효이고, 하도급법상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S사가 요구한 9억원 가량을 피고(D컨소시엄이)가 주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 공사금액의 16.3%에 해당한다”며 “결국 거액의 공사비를 받지 못한 S사는 자금압박을 받았고, 공사중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피고(D컨소시엄)들은 추가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원고는 추가 피해를 입고, 공사비를 주지 않은 피고들은 경제적 이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S사에 지급할 8억9650만원에 추가로 50%에 해당하는 4억4825만원을 추

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무비 등 직영투입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에 50%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공사 단가 절반으로 깎기도 =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증액하지 않았지만 단가 후려치기의 경우 ‘부당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애초 S사는 시스템동바리를 단가 1만7000원으로 공급키로 했지만 D컨소시엄은 88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D컨소시엄은 “자재는 많이 사면 싸진다”며 이를 고려해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원청의 전형적인 ‘단가 후려치기’인 셈이다. 이에 S사는 하도급법을 적용해 차액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S사가 계약변경 단가 인하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착공이 지연된 책임도 하청에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공사를 시작하기 S사보다 앞서 공사를 시작할 설비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각종 문제가 겹치면서 S사의 착공은 3개월 이상 연기됐다. 공사가 지연되면 관련 업체는 미리 준비한 장비 임대료는 물론 근로자 수

당까지 지연된 만큼 지급해야 한다. S사는 착공 준비에 들어간 11억5500만원을 D컨소시엄에 요구했지만 원청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착공연기를 하청에 책임을 지운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돌관공사 비용 및 하도급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직영투입비와 하도급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추가 공사대금 △시스템동바리 공사대금 등 합계 18억13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S사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자 D컨소시엄은 별도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반소란 애초 원고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피고 측이 역으로 내는 맞소송이다.

재판부는 “D컨소시엄이 S사의 공사비를 대위변제한 것들이 있다”며 11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는 원고 폐소(반소원고 승소) 판결했다.

갑질로 인한 S사의 손실에 대해 D컨소시엄이 배상할 의무도 있지만, S사가 제대로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청사에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복잡한 법정공방 끝에 S사는 D컨소시엄으로부터 7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오승원 기자 osw@naeil.com

“이래서 女 뽑으면 안돼” 여전한 모성차별

**임신·육아 모성보호제 정착 불구
51% “임신기간 불공정 대우받아”
휴가 내면 불평 듣고 퇴사 권유도
“임신근로자 괴롭힘 정부서 감독을”**

“이래서 내가 여자들 많이 뽑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회사원 명수현(가명·31)씨는 지난해 팀장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히 들리는 듯하다. 명씨가 임신 사실을 알린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팀에는 명씨 외에도 이미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었는데 자신까지 임신하자 팀장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명씨는 육아휴직을 쓰긴 했지만 팀장의 반 종용에 가까운 권유 탓에 당초 계획했던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임신기간에 정시퇴근을 하려 해도 ‘일이 너무 많다’는 동료들의 하소연을 모른 체 할 수 없었다. 명씨는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할 수 있는) 임신기 단축근로제도도 쓸 수는 있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모성보호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0개 기업 중 81.1%(811개)가 출산휴가제를 도입했고 배우자출산휴가를 활용한다고 답한 곳도 60.9%(609개)에 달했다.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하는 기업도 606개(60.6%)였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 출산휴가제 도입률이 77.2%, 배우자출산휴가 도입률은 19.4%였던 것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제도적으로야 안착됐지만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려는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

이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30~49세 여성 1,3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51.3%(706명)가 ‘임신기간에 불공정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 대우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꼽힌 건 ‘임신·육아를 위한 휴가를 내는 것 때문에 직장상사,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27.1%·중복응답)는 것이었다. ‘임신·육아를 위해 정시퇴근하는 것 때문에 불평을 들은 적 있다’(15.7%)거나 ‘임금인상·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11.2%였다.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도 5.0%나 됐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응답자 대다수인 86.9%(1,195명·중복응답)가 산전후휴기를 사용했지만 그 과정에

서 55.3%(661명)가 차별을 경험했다. 차별 유형으로는 ‘휴가기간에 업무관련 문의나 요청 때문에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왔다’는 경우가 1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하는 시기보다 빨리 또는 늦게 산전후휴기를 시작하도록 상사·동료가 권유’(11.0%) 했거나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10.6%)는 응답 순이었다.

모성보호제도가 정착기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캐나다는 임신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신여성 근로자 등록제 등을 도입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사학 사무직도 ‘낙하산 채용’ 막는다

앞으로 사립학교가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학교법인이 정한 방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던 탓에 사학에 빈번하게 발생해 온 이른바 ‘낙하산 채용’을 막자는 취지다. 교육 당국이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맞물려 사학 교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설 조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사립초·중·고교 및 대학은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공개전형 시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학 자율성 보장’ 정관 악용 법인 이사 딸 특채·손녀 채용 출근 않고 年 6000만원 급여까지

“신규채용 때 반드시 공채 거쳐야” 이찬열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사학은 현행법(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교원은 물론 사무직원의 급여 및 복무 등 임용에 관한 전반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자율성을 악용한 사학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사립 초·중·고교 친·인척 직원(교원 제외)’ 채용 현황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

계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학은 전국 262개에 달했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 10명 중 7명(66%)은 자녀·배우자 및 조카 등 3촌 이내 친·인척이었다.

실제로 교육부 감사 결과 경기도의 A사립대는 2016년 당시 총장 겸 법인 이사의 조카를 면접도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학교법인 사무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이 총장의 손녀 역시 2013년 같은 방식으로 대학본부 직원으로 채용됐다.

전북의 B사립 전문대학은 2014년 당시 이사장의 자녀를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학교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했다. 업무는커녕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자녀에게 대학은 한 해 약 6,000만원 가량의 급여까지 챙겨줬다.

교육 당국도 최근 사학 교직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사학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초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학혁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사학의 임의적 교원 채용에 대한 임금을 보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 등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에선 올해 조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는 인사지침을 공지한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 “정규교사 시험에 서류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내리꽂아 학교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다수 사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직원 공개 채용 등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청년고용장려금 재개… 기업당 한도 90→30명 개편

추경 국회 통과로 20일부터 신청 접수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혜택

고용노동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재개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해 재원이 마련돼서다. 고용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업별 지원 한도를 줄이고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최대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도입됐다가 올해 5월 예산이 고갈돼 신청이 중단됐다가 정부가 이달 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2162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접수가 재개됐다.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4만 7294곳이고 기업에서 새로 채용한 인원은 24만 3165명 정도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기업당 지원한도 90명→30명

-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과다 지원 방지

최고 고용 유지기간 6개월 도입

- 채용한 뒤 6개월간 고용 유지해야 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 30인 미만은 현행과 동일
- 30~99인은 두 번째 채용인원부터
- 100인 이상은 세 번째 채용인원부터



〈자료: 고용노동부〉

또 고용부는 그간 지적돼온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시행 초기에는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대거 채용하도록 한도를 설정했지만 소수 중견기업이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도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당 한도를 줄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한 뒤 정규직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속여 제출한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취지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돋기 위한 것이다.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설기업처럼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청년 인력을 대거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줄인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지원 인원을 차등 적용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장려금 덕분에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면서 “도덕적 해이 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제도를 개편했다. 부정 수급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미중 싸움에 한국 수출 감소,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할 수도”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미중 성장률이 각각 1%p씩 하락하면
한국 수출 2.4%p, 1.7%p씩 줄어 들어
日 규제까지 겹쳐 대외 불확실성 지속
한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할 것”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증가율이 2.4% 포인트, 1.7% 포인트씩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우리나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중무역분쟁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에 관한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나라의 수출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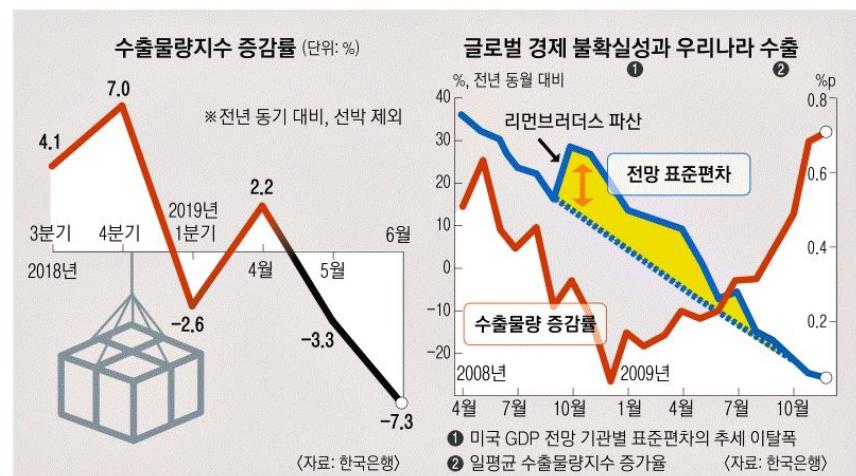
량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이후 6월 우리나라 수출 물량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 감소했다.

한은은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0.1% 포인트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3% 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미국 성장률을 전망하는 25~30개 기관들마다 GDP 전망이 제각각 달라 표준편차가 커질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봤다. 불확실성이 높아져 교역심리가 위축되면 한국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관별 미국 GDP 성장을 전망 표준편차 평균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0.1% 포인트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은 2.3% 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2000년 IT 버블이 꺼지면서 나스

닥지수는 급락했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이때부터 커지면서 한국의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국 수출 물량은 급감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의 경우 기관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한 표준편차는 0.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같은 달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5.2% 급감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IT 부문으로 옮겨붙으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세가 늦어지고, 단기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 대

출금리 하락 등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IMF “韓 실업률 3~4%, 알바 등 반영안돼 실제보다 낮다”

‘노동시장 침체’ 조사보고서

“광범위한 실업자들 포함 안돼
침체된 상황 제대로 파악못해”
반영하면 12%보다 높아질 듯

■ 국제통화기금(IMF)이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책정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업률의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IMF의 조사보고서 ‘노동 시장 침

체와 현실 간 차이:한국의 경우’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 시장을 조사·분석하는 실업률 지표가 실제 실업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업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지난 2012년 OECD 중 36위(3.2%), 2014년 36위(3.4%), 2016년 34위(3.6%), 지난해 29위(3.8%) 등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실업률에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그려지 못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구직활동에 적극

적이지 않는 경우와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 임시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잠재적 구직자 등을 고려해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로 공개하는 확장실업률은 기준의 3~4배 수준인 12%대인데, IMF는 이 역시도 실제로 생산성 격차 등의 지표를 다양화하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보다 광범위한 실업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필립스 곡선’이론이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낮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의미다.

반면 현재 국내 실업률은 낮은데, 물가상승률도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보면 2014년 1.3%, 2016년 1%, 지난해 1.5%로 지수 1~2 수준을 유지했고, 올해 2분기에는 0.7로 OECD 국가 중 33위에 머물렀다. 이를 필립스 곡선에 따라 실업률과 비교하면 2010년 실업률이 3.7%에서 2012년 3.2%로 떨어져 CPI는 올라가야 하지만, 같은 기

간 2.9에서 2.2로 떨어진다. 또 2014년 실업률이 3.5%에서 지난해 3.8%로 상승했는데, CPI도 1.3에서 1.5로 같이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아웃풋 갭’(Output gap) 개념을 적용해 실제 실업률을 살펴봐야 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IMF는 “한국 노동시장의 침체를 정부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실업률에서 나아가 생산성, 임금 및 물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다면수 기준(MVF)’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

관제 민족주의의 함정

홍세화 칼럼



지금 강남 한복판, 만 60살의 김용희씨는 한 평도 안 되는 철탑 위에서 6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 노조를 결성하려다 삼성재벌의 잔혹한 탄압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가 소멸하도록 놔둔 채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된 조선 노동자의 인권을 말하려는 것인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아니라 관제 민족주의의 함정이다. 가속페달만 있을 뿐 브레이크가 없는 관제 민족주의의 함정 속으로 미친 듯 뛰어들고 있다. 도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150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본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장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굳이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통지서를 보내자고 한다. 횃집 스시가 공격의 빌미가 되고 사케나 국산 청주나로 다투는 한국 정치의 수준은,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여당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한 민족주의와 다른 민족주의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이룬다. 한복소리로 아베를 규탄하지만 대부분 아베를 돋고 있다. 박근혜를 물리친 주체가 한국의 시민이었듯이, 아베를 물리칠 주체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시민이다. 일본 시민들과 척지는 대신 연대할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일이다.

가속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민족 주의는 핸들도 마구잡이로 틀기 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의 무역 도발에 대한 돌파구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를 제기했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라는 말에 낯설어할 나 같은 국민을 위해서였을까,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 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앞에 잠시 북한 땅을 지나 유라시아대륙을 달리는 철마의 모습과 함께 장밋빛 전망이 그려지는 듯했으나, 금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한



jaewoogy.com

현실 앞에서 가듯없이 사라졌다.

조급하거나 강박적인 목적의식은 합리적 사유 과정을 배제하거나 왜곡한다. 나의 양은 경제지식은 경제의 관건이 규모나 내수시장의 크기가 아닌 생산성에 있다고 말한다. 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쇼비니즘 민족주의에 젖어 있는 비서진에게서 나왔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황된 발상과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경제에 관한 기본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내용이 대통령의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오롯이 남는다. 그런데 과문의 탓인지, 아니면 모두 “열두 척의 배” “죽창가” “의병”으로 표상되는 관제 민족주의에 줄을 선 탓인지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청와대 권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어빙 재니스의 ‘집단사고’ 개념을 참조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이다. 집단사고는 낙관론에 집단의 눈을 멀게 하는 현상으로 외부를 향해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게 한다고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습을 계율리하여 실력이 부족하면서도 지역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으로 무장한 ‘민주건달’이 되지 않을 것을 자경문의 하나로 삼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은 지난했다. 길고 지난했던 민주화 운동 대열의 일원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는 이른바 ‘86세대’의 대부분은 윤리적 우월감을 갖고 있다. 반민주적 독재체제이며 매번적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운 당사자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은 선배의 권유로 몇권의 이념서적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로써 지역 우월감도 갖기 쉽다. 그리고 민족 주의자들이다. 지역 우월감과 윤리적 우월감으로 무장한 민족주의자에게서 자기성찰이나 ‘회의하는 자아’를 기대하는 것은 연복구어와 같다. 나침반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방향을 지시하기 전에 바르르 바늘을 떨지만, 이들에게선 그런 면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분단 상황은 시민사회운동의 모든 장에서 민족주의세력에게 다수파를 형성해 해제모니를 장악하도록 작용했다.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의 조악한 담론 수준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했다. 상호 간 토론하고 설득하는 관계가 아니라 힘으로 제압하거나 제압당하는 관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촛불에 힘입어 기적처럼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 중 적잖은 현실정치 예비군에게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생겼다. 정서적으로 끈끈히 연결돼 있는 이들 사이에도 일종의 “우리가 남이 가!”의 문화가 있다. 나는 공교육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걸 목도하면서 이들의 집권 목표가 정치철학의 실현에 있기보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는 데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양정철씨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 되었는데, 이 여당 싱크탱크의 연구 역량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일 갈등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뿐이다.

실력이 부족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한다. 정신승리를 위해서일까, 상대적으로 필적할 만하다고 보여서일까, 지금 관철되는 관제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한 자발적 복종에 비추어볼 때 짜증스러운 선택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의 경제도발 가능성을 8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모든 외교력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중하면서 이를 무시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위기 대응에 소홀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관제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일의 정신승리는 잠깐이고 경제 쓰나미가 민생을 둘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할될 수 있다. 멈춰야 한다. 민주당 어느 최고 위원의 말처럼 “이 땅에 친일정권을 세우겠다는 일본의 정치적 야욕”이 실현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적 매판세력보다는 그래도 현집권세력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노동존중 사회가 완전히 물 건너가선 안 되기 때문이며, 국민 연금을 탈취한 삼성재벌의 이재용이 국일경제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강남 한복판, 만 60살의 김용희씨는 한 평도 안 되는 철탑 위에서 6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다 삼성재벌의 잔혹한 탄압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가 소멸하도록 놔둔 채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된 조선 노동자의 인권을 말하려는 것인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자. 장발장은행장·‘소박한 자유인’ 대표

기고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울산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노사 관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하지만 두 기업의 대립적 노사 관계는 노동자 개개인의 자존감과 기업 경쟁력 모두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울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암울한 기분에 빼지게 한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이미 생산된 금전적 파이를 나누는 분배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현대적 인간에게 금전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러한 금전적 수단이 목적이 되거나 금전 이외

의 다른 유용한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도외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은 결코 인간의 본성이거나 신성한 덕목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1883년 폴 라파르그는 '여유로울 권리(The Right to be Lazy)'라는 논문에서, 인간은 원래 일하기보다는 놀기 위한 존재인데, 산업화와 함께 노동은 인간생활의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신성하기 까지 한 노동은 인간이 가진 다른 본래의 가치를 훼손해도 되는 제1의 미덕이 되었다고 풍자한 바 있다. 우리 한국인, 특히 북구 유럽에 버금가는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울산의 노동자들도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일 중독, 금전 중독에 빠져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삶의 방편도 있다. 가족, 여가, 나만의 시간 같은 일 이외의 삶의 영역을 즐기고 개척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울산에서만 매년 2000명 이상 정년퇴직하고 있다. 이 산업전사들은 퇴직 후의 행복한 삶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지금은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013년까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교대제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오로지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만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 시 대규모 인력조정의 쓰라린 경험은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시들게 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은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 장시간 노동으로 소홀했던 가족관계, 직장 동아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미활동,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숙련기술과 자존감의

결여는 퇴직 후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럼 퇴직을 한참 앞둔 현대차 노동자들은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공정 자동화, 친환경차 생산에 따른 공정 축소 등의 여파로 신규 입사자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0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대차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는 워라밸이다. 워라밸은 직장과 나의 삶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 개인적 삶에서도 균형을 이루면서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모두 행복 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은 직장을 돈벌이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일은 나를 인간적으로 성숙시키고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자아실현의 장인 것이다.

울산에는 자동차(1967년 현대자동차

현대차 노동자와 '여유로울 권리'

설립)와 조선산업(1972년 현대중공업 설립)에 앞서 1962년부터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초기 산업화를 선도한 글로벌 에너지 회사 SK이노베이션도 있다. 이 기업도 근 20년간 대립적 노사관계를 경험했지만, 2017년부터 물가연동형 임금 인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남성 근로자의 가정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고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발전에 노동조합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금전적 보상만을 노사협상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워라밸의 가치를 직장, 가족, 공동체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반영함으로써 노동자의 자존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울산의 노사관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층 더 성숙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삼성맨 약속해놓고…” 계약해지 날벼락 운전기사의 눈물

삼성 ‘2년 만료’ 6명에 해지 통보
작년 “운전기사 직접고용” 발표해
무기계약직 전환 ‘희망 고문’만
삼성 “전체 직접고용 약속 안해”

삼성그룹이 지난해 10월 계열사 임원들의 차량을 운전하는 ‘파견직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2년 파견기간 만료 뒤 다시 계약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운전기사가 여럿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기사들은 ‘삼성맨’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삼성은 ‘운전기사 모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8일 <한겨레>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임원 차량을 운전하던 기사 6명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삼성전자 쪽과 소속 용역업체 사이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해 운전기사 등을 파견받는다.

문제는 삼성이 지난해 10월 “각 계열사의 임원 운전기사 400여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당시 삼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직접 고용 추진 방침을 발표했고, 이는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삼성은 당시 2년 넘게 일한 파견직 운전기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발표 시점에 2년 계약 만료 기간이 남았던 이들은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7년 8월 용역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파견돼 운전기사로 일해온 김선호(가명)씨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은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고, 김씨는 오는 28일까지만 일하게 됐다. 김씨는 “삼성이 ‘파견직 운전기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 정년 보장은 물론 복리후생 혜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줘 이른바 ‘삼성맨’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계약기간 2년 만료가 다가오자 갑자기 퇴사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직접 고용 방침 발표’ 당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서 일하던

근무기간 2년 미만 파견직 근로자 14명 가운데 6명이 이미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고, 김씨를 포함해 7명이 곧 일자리를 잃게 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는 ‘일본어 특기자’ 1명뿐이다.

김씨는 “삼성은 올해 초에도 운전기사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면담에서 ‘여러분 중 상당수는 무기직이 되실 분들’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기사들을 쫓아내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삼성에 호소문도 보내고, 면담도 요청해봤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은 파견직 운전기사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글을 올린 상태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삼성은 2년마다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파견법을 악용해왔다”며 “삼성이 운전기사의 업무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파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2년 이상 일한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 것이지 운전기사 전체 직접 고용은 약속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경향신문

2019년 08월 09일 금요일 027면 오피니언

‘서서 대기’ 강요하는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해야

백화점 등 유통업계 종사 노동자들에게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서 있는 자세로 대기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노동환경 개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몇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움직임이다.

인권위는 산업부장관에게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범위 확대 검토,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을 점검·개선할 것과 미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의 화장품 판매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에선 백화점·면세점의 화장품 판매 노동자가 하지정맥류나 방광염 등 각종 신체 질환이나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일반

인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 내 고객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노동자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사실 현재도 큰 틀에서 관련 법규는 갖춰져 있다.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마트 내 노동자를 위한 의자 비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와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가이드’ 등을 마련해 유통업체에 권고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관련 부처에 세부기준 마련과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과태료 신설 검토 등 내용이 구체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를 표방한다. 해당 부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과 고객도 ‘고객이 왕’이기에 앞서 ‘누군가의 부모 이자, 자녀’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장실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후진적인 노동환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병역특례 요원 폐지 강행 ‘中企 일꾼’ 3만명 사라진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안을 놓고 중소기업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역자원이 급감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내년 주 52

**文대통령 中企 배려 언급에도
국방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두고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소재·부품 연구를 병역특례 요원에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처지다. ▶관련기사 A9면

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까지 전문연구요원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은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기준 병역대체 복무요원은 3만6770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나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 목소리도 많아 발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면서도 “늦어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베어링업체를 방문해 “병역특례를 가급적 중소기업에 많이 배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만큼 최종안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몇 년 유지해주는 식으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한다”며 “적정 군병력 규모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임락근 기자 argos@hankyung.com

“특례요원 없애면 생산라인 당장 차질” 中企 한숨만

화성 A社 직원 54명 중
8명이 산업기능요원

“내년 주52시간도 버거운데 …
있는 인력마저 빼가나” 반발

“생산직원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산
업기능요원은 생산 라인의 핵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줄어들면 어디 가서 인
력을 구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한 기계제조 중소기
업의 A인사부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
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
소 방침에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
에 처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소기업은 전체 직원 54명 가운
데 8명이 산업기능요원이다. 전체 인력
의 약 15%를 차지하는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생산라인에 배치돼 있다. A부장은
“현역 복무 대상자는 34개월을 근무해
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
업기능요원은 핵심인력”이라며 “약 3년
간 일하면서 직원들의 숙련도도 올라가
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1석2조”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병역특례로 입사한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을 의무 근무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뽑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총 7년을 일하면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회
사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내년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이 된다. A부장은 “당장 내년부터
더 많은 인원을 뽑아야 하는데 산업기능
요원마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 생산 라
인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며 “최저임
금은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고 사
람은 더 뽑아야 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
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때문에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베트남에 공장
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서울 온수동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
고 있는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없어지면 대
부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될 것”이라며

“외국 인력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축적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하면 복
무 기간이 끝나도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
에 그들의 경험과 자산이 국내 산업에 축
적된다”고 덧붙였다. 김문식 중소기업중
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양질의 대체복
무요원은 중소기업에 천군만마”라며 “뿌
리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고급 인력
을 중소기업에서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
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
는 “안보를 위한 병력 유지도 중요한 부
분이지만 산업계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이를 보완해나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부품 국산화하라면서 병역특례 없애…中企 “R&D 포기할 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방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 현장은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반도체 전략물질 연구를 병역대체 지원인 전문연구요원에 의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연구개발(R&D) 시스템 기반이 흔들리게 될 처지다. 업계에서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발발했는데 원군은커녕 아군 병사를 빼내는 격”이라는 비판이나온다.

병역대체 축소 발표 임박

年 2500명 선발 하던 전문연구요원

2024년까지 절반 감축 예정

“경제전쟁 터졌는데 병사 줄이니”

中企 R&D시스템 ‘위협’

전문요원 활용 기업, 中企가 75%

기술개발에 연구인력 의존 커

제도폐지 팬 연구기반 ‘흔들’



병역대체 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 제도

기업의 제조 생산인력 지원

전문연구요원 제도

기업 연구기관의 R&D 인력 지원

목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산학협력 5~9인 벤처기업)

대상

중소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국 공립대 연구기관 등

복무 기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편입 대상

학사학위 이하(현역)
자격증 불필요(보충역)

석사 이상 학위(현역)
자연계 학사학위(보충역)



중소 기술경쟁력 핵심 ‘전문연구요원’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기업의 제조·생산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능요원(학사학위 이하)’과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전문연구요원(석사학위 이상)’ 제도로 나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에 따라 26~34개월,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 근무한다.

이 중 전문연구요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꽃’으로 불린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172개 기업에서 788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008년 1445개에서 지난해 2172개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727곳이 늘어났다. 중소기업이 75.1%를 차지한다.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이 전문연구요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는 매년 2500명씩 선발해온 전문연구요원을 2024년까지 절반

사도 전문연구요원 17명을 핵심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력난 증가 버팀목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축소가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에 관한 사안이라면 산업기능요원 폐지는 당장 생존의 문제라는 게 산업 현장의 호소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2022년 선발 인원을 50%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6000명을 배정해왔으나 올해 4000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기준 산업기능요원은 2만 8789명으로 전국 8236개 기업에서 근무 중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근무비율이 55.1%로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도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공업분야 복무 비중이 94.9%로 절대적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축소·폐

지되면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 제조업체는 취업난이 무색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생산성은 낮고 인건비는 더 드는 외국인 근로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난도 심화 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직업계고 남학생의 86%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산업 현장 인력을 빼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연간 1만 명이 넘는 미소집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거나 전문성이 높은 부사관 비율을 높이는 식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노조도 국난 극복에 합심해 박수 받을 기회 놓치지 말라

한·일 및 미·중 간 경제전쟁이 동시에 터지면서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절체절명의 복합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 와중에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주력부대인 금속노조 소속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난 5일 ‘재벌규탄 문화제’를 시작으로 ‘하투(夏鬪)’에 돌입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민노총 핵심인 자동차·조선산업 노조가 가세해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구조조정 반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릴레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설노조와 금융노조의 파업도 초읽기다.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을 늘리는데만 몰두하는 대형 노조의 행태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부적절하다. “불난 집에 기름을붓겠다는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친노동’을 표방하는 정부조차 민노총 등의 이번 하

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지경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어 노사의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파업 중단을 요청했다.

노조와 최일선에서 맞부딪치는 기업들은 더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한경**과의 인터뷰(8월 8일자 A5면)에서 “노조도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도 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 내부에서도 “지금이 이럴 때인가”라며 매년 숙제하듯 관행적으로 파업하는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민노총을 비롯한 대형 노조지도부가 이런 현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노조를 정치적 권력도구로 삼는 한줌의 직업적 ‘꾼’들을 빼고

는 달라진 상황에 맞는 노조활동의 변화를 고민하는 모습도 뚜렷하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세계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노조의 미래를 고민하는 내용의 두툼한 연구보고서를 몇 달 전에 내놓은 게 단적인 사례다. 지금의 위기상황은 노조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한 ‘정치화의 덫’과 그로 인한 습관성 파업으로부터 빠져나올 기회가 될 수 있다.

노조가 구태(舊態)를 벗어던지고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바깥으로부터의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부화하려고 할 때 밖에서 어미닭이 같이 겹질을 쪼아주는 줄탁동시(啐啄同時)와 같은 외부 지원이 노조의

환골탈태에 필수적이다. 이 작업을 해내야 할 곳이 바로 정부다. ‘87체제’ 이후 역대 정부는 조직화한 대형 노조의 온갖 요구에 밀리며 거대 권력화를 야

기한 원죄를 안고 있다.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선진화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노사관계 후진화’라는 정반대 결과를 낳고 말았다. 기득권을 거머쥔 거대 노조 조합원들의 대우만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을 뿐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는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시장 내 양극화로 귀결되고 만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노조의 일대변신을 이끌어내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거대노조들도 싸늘한 시선 대신 모처럼 국민의 박수를 받는 전략적 선택과 근본적 변화를 고민할 시점이다. 지금의 복합경제위기를 뒤틀린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화위복(轉禍爲福)’ 사례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자동차 조선 건설 금융 등 대형 노조 ‘릴레이 하투’ 돌입
기업들 ‘날벼락’ 와중에 민노총은 “재벌 해체” 정치공세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투쟁 중독’ 끊는 계기로 삼아야**

세상읽기



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얼마 전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 잠시 내렸다. 15분의 짧은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화장실에 잠깐 들른 후 바로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 한 터라 출출했기 때문이다. 어느 때처럼 무엇

을 먹을까 고민하다 주문대로 갔다. 사람 대신 사람 키의 입간판이 맞이했다. 더 이상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으니 키오스크(Kiosk)라는 무인자동결제기를 사용하라고 일러주고 있었다. 키오스크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서두르고 재촉하는 김새가 느껴졌다. 스크린 터치를 몇 번 하다 연이어 실수를 하니 조바심이 났다. 우물쭈물 제대로 주문도 못하고 나왔다. 가판대에서 핫도그나 살까 했더니 여기도 키오스크였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섰다. 어느새 버스 떠날 시간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늦은 저녁에 식당에 갔다.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둘러보았지만 손님은커녕 주문받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속이 훤히 보이는 주방에 요리사만 달랑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보였다. 지난번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엔 아주 자신만만하게 키오스크 앞에 섰다. 몇 번의 스크린 터치를 통해 무사히 주문을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음식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아주 호기롭게 음식을 사겠다고 한다. 그런데 키오스크로 주문한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한다. 며느리가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나서자 아니라며 신용카드를 뽑아든다. 몇 번의 실수를 거듭하자 보다 못한 며느리가 자기 신용카드를 꺼냈다. 가벼운 실랑이가 오간 후 결국 시어머니는 포기하고 며느리가 계산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나 활용되었던 키오스크가 일반 식당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는 키오스크에 떠넘기고 '물질'을 팔고 있다. 명분은 효율성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욕구를 최대한 빨리 성취하게 해준다. 판매자는 인건비를 줄여 더 많은 이윤을 빨리 뽑아낸다. 구매자는 표준화된 제품의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음식을 골라 최대한 빨리 위장의 결핍을 채운다.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이를 사회의 맥도널드화라고 일찍이 말했다. 맥도널드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효율성이다. 하지만 판매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니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성마저도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이를 깨닫게 되면 구매자의 방문이 줄고 판매자의 이윤도 축난다.

일반 식당에까지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키오스크 사회'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메타포다.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대전환은 양가적이다. 우선 전자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위자에게 자유를

준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전자기기를 통해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극대화된다. 그들 모두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의례의 압박에서 벗어난다. 서비스산업이 요구하는 감정노동과 감정관리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사회학자 지멜이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든 '사회적 어울림'(sociability)을 쪼그라트린다. 사회적 어울림은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마치 동등한 것처럼 대하는 동시에 서로를 독특한 존재로 존중한다. 신분제를 제거했다는 현대사회에서도 시민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그럼에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사회적 어울림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키오스크 사회는 다른 시민들과 마주할 사회적 장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키울 기회 자체를 축소시킨다.

키오스크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어울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전자기기와 상호작용하려면 교육받아야 하듯 사람과 상호행위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한다.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대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게임을 펼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키오스크의 확산을 단지 경제적 효율성이나 접근의 평등성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다. 키오스크 사회가 번져갈수록 더욱더 사회적 어울림의 공간을 이곳저곳 널리 구축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회